

AI 사태, 한 달을 되돌아본다



고성진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겼다. 발생 초기 원발 지역인 전북을 넘어 전남과 충청권 일대로 급속히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였던 AI는 최근 들어 다행히도 산발적 형태로 바뀌며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야생철새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며 야생철새의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경기와 강원 일대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AI 사태로 인해 업계는 큰 홍역을 치렀다. 2월 18일 기준 400만 수 가량의 닭·오리가 살처분되면서 사육 농가에 깊은 절망을 가져다 줬고,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와 계열업체들이 속출했다.

한국계육협회에 따르면 AI 발생 이후 소비 급감에 따라 재고 물량은 비축 및 매몰수수를 제외한다고 해도 이동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적체돼 있는 물량은 1,100만수에 달하는 상황이다. AI 발생 이전 5,200톤이던 비축물량은 어느덧 8,000톤을 훌쩍 넘었다.

협회는 AI 전례를 감안할 때 AI 사태가 진정되고 소비가 살아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두 달여 가량으로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전체 적체 물량은 총 2,400만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적체가 예상되는 2,400만수 중 비축이 시급히 요구되는 1,000만수에 대한 비축자금의 무이자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계열업체가 외부 창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조율을 마

무리했다. 계열사들은 자체 비축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병아리 입식을 줄여 향후 수급 차질 등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AI 여파 속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소비 급감이다.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발생 초기 소비 감소폭은 크지 않았지만,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닭고기 소비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민관이 전방위적으로 닭고기 소비 촉진 캠페인을 통해 AI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시중에 유통되는 국내산 닭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여기에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 시점과 맞물리면서 닭고기 소비가 반짝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소비 급감으로 인해 계열업체의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업계 곳곳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뜻하지 않게 토종닭 농가가 음독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도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컸다.

소비 감소로 인해 계열업체의 경영 상황은 크게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가의 수익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전통 시장에서 산닭 거래가 중단되면서 토종닭 농가들의 어려움도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 양계업자들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AI로 인한 피해가 1차 피해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에 따른 소비 부진과 계열업체의 매출 감소 등은 2차 피해로 여겨진다. 문제는 1차 피해의 경우 정부 당국과 농가



지난 10일 세종청사에서 닭·오리고기 안전성 및 소비확대 간담회 및 시식행사가 열렸다

의 노력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지만, 2차 피해는 일정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계열업체의 비축 물량도 적지 않아 닭고기업계가 AI 발생 이전으로 정상화되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 역시 피해 농가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과 함께 계열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업계에선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닭고기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 역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품질이 좋고 안전한 국내산 닭고기를 예전처럼 더욱 사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해 벽두부터 AI 발생으로 인해 잔인한 신년을 맞은 닭고기 업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